

아·태지역협력의 동향 및 전망

- 2007년도 제6차 아태전략포럼 결과 -

2007년 12월 6일(목) 07:15 ~ 09:00

서울, 롯데 호텔 36층 피코룸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I. 개 요

1.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07:15 ~ 09:00

2. 장 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피콕룸

3. 주 최: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4. 주 제: 아·태지역협력의 동향 및 전망

5. 프로그램:

o 07:15 ~ 07:35 조찬 및 환담

o 07:35 ~ 07:40 개회사

: 양수길 KOPEC 회장

o 07:40 ~ 08:10 발표

- 아태지역 경제협력 동향

: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아태지역 금융통화협력

: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o 08:10 ~ 09:00 토론

6. 참 석 자: 총17명

o 양수길 KOPEC 회장

o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o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아태지역 금융통화 협력]

o곽수중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o 김상겸 KOPEC 사무국장

o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o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T통상전략센터 소장

o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o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o 안성국 외교통상부 지역협력과장

-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팀 팀장
- 이상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 이순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왕윤종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
- 정 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조해형 나라홀딩스 회장

II. 회 의 록

개회: 양수길 KOPEC 회장

- 최근 여러 지역 기구의 등장으로 아·태지역 협력 및 통합 논의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가고 있음.
 - 전문가들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함.
- 지난 11월 22일 KOPEC이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APEC,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 점차 복잡해지는 역내 지역협력관계구도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논의됨.
 - APEC이 동아시아 금융 위기 때 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역자유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APEC은 의제(Agenda)의 전환이 필요함.
 - 아세안지역포럼은 지금까지 갈등 해소 등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음. ASEAN+3, East Asia Summit, Six Party Talk 등이 하나의 기구로서 잠재성이 있다고 판단됨.
 - 역내 논의의 핵심 이슈는 중국의 화평굴기(和平崛起)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미국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임.
- 여러 기구들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앞으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PECC의 결론은 동아시아 지역주의(ASEAN+3, EAS)를 아·태지역주의(APEC)에 상호보완적으로 포함시키자는 것임.
 - ASEAN+3는 동아시아 통합을 강화시키는 역할이 적합.
 - EAS는 정치·경제·안보문제 등에 대한 정상모임으로 활용. APEC 정상회의는 참여 범위가 넓고, 경제에 초점(focus)을 맞추고 있으므로 서로 역할 분담이 가능함.
- 중국의 부상 등으로 최근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한 결과가 염려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아태지역 내 정부 간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 담당관들을 모심.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태지역 경제협력 동향”

발표: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아태지역 협력 논의 배경

- 아·태지역에서의 통합문제는 유럽통합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APEC 창설로 시작됨.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APEC의 dynamism이 상실되면서 소지역통합(sub-regional grouping)에 더 관심이 집중됨.
- 동남아 국가들이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회의와 이에 따른 동북아와의 관계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ASEAN+3가 논의의 원동력(driving force)이 됨. ASEAN+1, 한·중·일 3국 통합, ASEAN+3가 추가되어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ASEAN+6와 FTAAP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임.

○ ASEAN+1

- ASEAN+1은 아세안의 지역통합 논의에 대한 의지와 중국, 일본의 지역통합 주도 경쟁에 의해 발전됨.
- 우리나라는 아세안과의 FTA 논의를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보이고 있음. 최근 일본보다 앞서 FTA 상품분야 협상을 완료하였고, 중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FTA 서비스 협상이 타결됨.
- 또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11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한·아세안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합의됨.

○ 동북아 협력 논의

- 한·중 FTA는 산·관 공동연구, 한·중·일 FTA는 민간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한·일 FTA는 정부 간의 협상이 중단된 상태임.
- 중·일 FTA 논의는 진전이 거의 없음.
- 중국과 일본 간의 연결고리(missing link) 확보에 동북아 협력의 가속화 여부가 달려있음.

o ASEAN+3

- 제11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10년간의 통합 논의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제시하는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 한·중·일 각국이 협력에 기여한 부분을 평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동북아 중재자(facilitator)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ASEAN+3는 앞으로도 계속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주된 추진체(main vehicle) 역할을 하면서 여타 협의체들과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
- 아세안의 이익을 반영한 ASEAN+3 협력기금 조성이 합의되었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발전을 통한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였으며 EAFTA 2단계 연구를 2009년 완료하기로 함.
- 별도로 ASEAN은 제13차 연례 정상회의에서 출범 40주년을 맞이하여 ‘아세안 헌장’을 채택함. 이 헌장은 2015년까지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의 완성을 내용으로 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청사진을 담고 있으며 아세안 역사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o ASEAN+3 FTA(EAFTA)

- EAFTA 타당성 연구가 작년 8월 완료되었고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협상 개시에는 많은 회원국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2007년 초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EAFTA 제 2단계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어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는 ASEAN+3가 추가 되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데 이해가 일치하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일본은 ASEAN+6에 전략적 이해가 맞춰져 있음.

o ASEAN +6 FTA(CEPEA)

- 2007년 1월 EAS 정상회의 시 일본 측 제안으로 CEPEA 민간연구개시에 합의함.
- 지역통합논의과정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임.

o APEC

- 2007년도 시드니 APEC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특별성명이 채택됨.
- 또한 FTAAP의 구체적인 이행합의 사항과 이슈목록을 작성하고 역내 FTA 연구, 분석을 통해 상호 통합 방안을 검토하여 2008년 리마 정상회의에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를 제출하기로 함.

o Free Trade Agreement of Asia Pacific(FTAAP)

- 2004년 ABAC 제안 당시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6년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주도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기로 하여 2007년에는 그 가능성과 추진방안 조사 실시가 원칙적으로 합의됨.
- 이는 DDA 체제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APEC을 통해 다자무역체제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최근 미국을 배제한 동아시아 통합 움직임에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려는 전략으로 생각됨.
- APEC이 협상 기구가 아닌데 법적인 구속력이 필요한 FTAAP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는 배제됨으로써 APEC이 추구하는 열린 지역주의에 배치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FTAAP 논의의 관건임.
- 미 무역대표부 웬디 커틀리의 논설에 따르면 미국은 FTAAP 추진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방안
 - 기존의 역내 FTA를 묶는 방안
 - 지속적으로 챕터를 하나씩 타결하는 방안
 - FTA를 체결하고 나서, 가입 조항을 확대하는 방안
- 기존에 역내에서 체결된 FTA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서 FTAAP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아·태 경제통합에서 미국이 배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임.

o 지역통합논의에서 향후 과제

- 지역통합 논의과정에서 주변화(marginalize)될 가능성과 dynamic center가 동북아로 이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통합과정에서 미국의 포함여부와 포함 한다면 어떤 형태로 포함시킬 것인가
- 이질적 발전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그리고 어느 수준으로 통합할 것인가

-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할 것인가
- 주요국(major players)들의 상이한 전략적, 정치·경제적 목표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

o 우리의 기본대응방향

- 중국의 성장으로 역내 대표로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 이는 국제논의 전반에 해당하는 딜레마로서 총체적으로 논의하여 극복해야 할 사항이나 해법을 찾기가 어려움.
- 우리나라의 교섭력(Bargaining Leverage)을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임.
- 최근 4~5년간 FTA에 관해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으며 현재 46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 또는 논의 중임. 이를 통해 역내 지역통합논의에서 발언권을 높이고 협상력을 강화할 계획임.
- ASEAN+1에서 점차 논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ASEAN+3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되 ASEAN+6로 인해 기존의 통합 노력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APEC 내 중국, 일본, 미국이 얽힌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이 할 수 없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음.
- FTAAP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며 프로젝트 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입장을 정립할 계획임.

“아태지역 금융통화협력”

발표: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 제도화 및 기구화 논의의 진전

o Chiang Mai Initiative(CMI)

- 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엄격한 조건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이 상호자금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논의가 시작됨.
- 현지 통화를 담보로 외환보유고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중앙은행 간의 양자간 스왑(bilateral swap) 논의로 시작하였으나 그 협정이 많아지면서 이를 다자간으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됨.

- CMI 체제의 완결이 06년 재무장관회의에서 서명됨.
- 긴급자금지원 규모가 395억불에서 820억불로 증액됨.
- 위기발생시 참여국들이 모여 1주일 내 합의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집단적 의사결정 체제를 도입

o CMI 다자화

- CMI의 다자화, 기구화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어 07년 재무장관회의에서 회원국이 외환보유액을 출자하되 해당 출자금은 각국이 직접 관리·운영(SRPA)하는 형태로 공동펀드 재원조달을 하고 법적구속력을 갖는 단일의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자는 CMI 다자화 기본방향이 합의됨.
- 현재는 공동펀드의 총 규모와 자금지원 방식 등을 협의 중이며 08년 5월 재무장관회의까지 합의를 도출하고 늦어도 09~10년까지 구체적인 조직 구성(setup)을 할 계획임.
- 전체 규모가 너무 크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너무 작으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 아세안국가들은 위기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큰 규모를 선호하고 일본, 싱가포르 등은 위기발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적은 규모를 선호. 현재 8백억~1천억 불 규모로 논의되고 있음.
-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투표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일본이 주장한 IMF 공식대로 경제력에 비례해서 부담할 경우 우리나라는 큰 발언권을 얻을 수 없음.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을 티어로 만들고, 아세안 국가들을 따로 티어로 묶어서, 티어 내에서 부담금을 결정하자고 제안함. 아세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음.
- 우리의 제안대로 자금 부담을 분배할 경우, 한·중·일 3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자금 부담을 분배하는 문제가 남아있음.
- 중국이 Currency Pooling에 홍콩의 참여를 주장함. 한국과 일본은 반대 입장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찬성하고 있음. 다른 사안들이 협의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적으로 결론 남.

□ 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

o Asia Bond Market Initiative(ABMI)

- 아시아 외환위기 원인 중 하나가 아시아 국가가 현지 통화로 투자를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면서 아시아통화채권시장을 키우기 위한 논의가

시작됨. ABMI는 실질적으로 진전과 이익이 있는 분야임.

- 현재 6개 분야에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연구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중 2가지 과제가 기구 창설과 연관된 주요 사항임.
- 첫째, 역내 신용보증·투자제도에 관한 과제로 아시아 각 나라 채권에 투자가 저조한 이유를 신용 보증 문제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용 보증기구를 창설이 논의되고 있음.
- 둘째, 결제제도에 관한 과제로 아시아에서 채권이 거래되는 시간대와 유로 클리어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시간대 내에서 결제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됨. 이 역시 새로운 기구 창설을 필요로 하며 우리가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논의를 리드하고 있는 분야임.
- 또한 감시기능(surveillance)이 중요한데, 이 역시 사무국이 필요함. 2~3개의 사무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 역시 치열한 경쟁탈전이 예상됨.

○ 금융통화통합 논의

- 학계의 관심은 높으나 실무적인 진전은 느린 부분임.
- 아시아 공동통화(RMU)에 대한 논의에서 일본은 ADB와 협력하여 엔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중이며, 중국은 환율정책의 자율성 침해 및 일본의 주도권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고 있음. 일본은 연구라도 계속 하자는 입장이나 중국은 연구조차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절충적으로 연구는 하지만 정책 구속력(policy binding)은 없는 것으로 하자고 주장함.

○ EMEAP에서 10억불을 모아서 아시아 국가들의 달러화 표시 채권을 샀음. 최근 20억불을 더 투자하여 현지통화표시채권을 구입함. 수요를 견인하는 긍정적 역할을 함. 또한 월드뱅크에서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해 50억불을 현지통화표시채권에 투자할 계획임. 향후 아시아지역 현지통화채권 투자 증대가 기대됨.

○ ASEAN+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EAS에 대해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이나 선호하는 듯함. 중국과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임.

○ AMF 설립에 미국과 IMF는 모두 반대 입장이었음. 그러나 현재는 그 기본 구조가 전체 지원자금의 20%는 단독(unilateral)으로, 나머지 80%는 같이

빌려주는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미국과 IMF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으나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체 토론

☐ 왕윤중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

- 한·미 FTA의 국회 비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궁금함.
 - 특히 내년엔 미국도 대선 국면이고,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치인들도 많음. 한국의 경우에도 참여정부의 업적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비준이 힘들 것이 우려됨.
- 복잡계 이론에서 허브에 관해 많이 이야기함. 허브(hub)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의 FTA 체결보다는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를 연결해주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아태지역에서 그 고리(missing link)는 중국과 일본임. 한국이 연결고리(linker) 역할을 담당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함.

☐ 양수길 KOPEC 회장

- 연결고리(linker) 역할을 하자는 것이 한·중·일 FTA를 하자는 것인지 궁금함.

☐ 왕윤중 SK경영경제연구소 상무

- 굳이 한·중·일 FTA를 하지 않더라도, 한·일, 한·중 FTA를 통해 그 연결다리 역할을 하자는 이야기임.

☐ 양수길 KOPEC 회장

-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한국정부의 전략이 궁금함.
- FTA가 지역통합에 기여하는지 의문임.

- 학계에서는 한·일 FTA, 한·중 FTA를 하면, 한·중·일 FTA가 될 것이고 나아가 동아시아 FTA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그러나 현재 경제 여건 상 한·일 FTA, 한·중 FTA 모두 힘들다고 생각함.
- 오히려 우리의 리더십으로 처음부터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함.
- 또한 아태지역 내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해 온다던가, 아세안과 제휴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야 함.

☐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o 한·미 FTA 비준 시기는 미국의 진전 여부가 더 관건임.
- 우리는 대선 전에 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양 정당이 대선 이후에 다루기로 합의함. 미국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3월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가 있음. 내년 상반기에는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함.

☐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o 미국과 FTA 협상을 완료한 나라들은 거의 다 비준이 되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만 왜 미국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지 궁금함.

☐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o 한·미 FTA에서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 업계가 아닌 노동계에서 FTA 반대 명분으로 이슈화 함. 정치화되어 실질적인 경제 손실 보다 왜곡된 측면이 있음.
- o 지난 수년간 지역통합 논의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과거보다 다소 축소된 측면이 있으나 적극적인 FTA협상 체결을 통해 입지를 강화하고 교섭력(bargaining leverage)을 높일 수 있음.
- o 일본, 중국과의 FTA가 반드시 한·중·일 FTA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중국과 일본과의 FTA는 당장은 무리임. 중국과의 FTA는 농산물 분야의

조정이 힘들어서 일단 다른 분야로 확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임. 일본과의 FTA는 우리 제조업 쪽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해서 일본이 농산물 양허 수준을 높이지 않는 이상, 협상 재개가 쉽지 않음.

- 동아시아 FTA나 한·중·일 FTA의 체결이 개별 FTA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큼. 그러나 이미 일본, 중국과의 FTA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므로 진전 상황을 봐서 선택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적극적인 태도로 한국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함.

☐ 양수길 KOPEC 회장

- o 동아시아 FTA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함. 현 정권에서는 동북아에 집중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시야가 좁아졌다고 볼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발동을 걸어야함.

☐ 박수종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o 내년 상반기에 한·중 FTA 논의에서 진전이 있다면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비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o 한·미 FTA를 우리나라가 먼저 비준을 한다면 미국과의 소고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그리고 한·EU FTA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수길 KOPEC 회장

- o 성한경 박사의 견해와 다르게, 한·미 FTA와는 별도로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이순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o 인도의 부상이 경제협력 면에서 우리와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인도의 성장이 매우 빨라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인도의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정치적, 외교적으로 우리나라의 입지를 좁혀갈 수 있다고 예상함.
- 인도가 우리나라와 FTA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과 FTA하기 위한 수단(leverage)이라고 생각됨.
-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므로 한·인도 FT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며 또한 ASEAN+3 논의의 진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양수길 KOPEC 회장

- o 환율 차원에서의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함. 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함. 전문가들이 정부의 이후 과제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음.

☐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 o 기후변화 이슈는 지난 번 APEC부터 재무장관 프로세스에 포함하여 논의하게 됨. 이는 관련 세금 문제 등이 재무장관의 소관이기 때문임.
- o 환율에 관한 문제는 통합이 힘들기 때문에 각 나라 경제를 감독(surveillance)하면서 검토(peer review)됨. 환율을 같이 움직이자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실질적 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음. 금번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엔 캐리 트레이드와 중국 환율 문제가 많이 논의됨.

☐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o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가 개막됨. 별도로 통상장관회의와 재무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임.
- 한국은 유엔 프로세스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주요 경제국 회의(Major Economies Meeting on Climate Change)에 모두 적극 참여하되, 당분간 미국과 EU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총리께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기후변화문제를 다루라고 지시하심. 업계와의 협의도 필요하며 학계에서도 중요한 정책연구과제로 논의할 필요

가 있음.

- 한·미 FTA를 한국이 먼저 비준하면 미국이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지만 국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음.
- 중국과의 FTA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큼. 오히려 한·EU FTA를 먼저 체결하는 것이 미국을 더 압박할 수 있을 것임. 인도와의 FTA 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인도는 배척하기 보다는 협력하여 우리의 교섭력(leverage)을 키우는 상대로 삼아야 함.

□ 양수길 KOPEC 회장

- 우리가 아·태 지역의 노동력 이동과 이민에 관해서 PECC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음. 좋은 권고사항(recommendation)이 나오면 정부가 APEC이나 ASEAN+3 차원에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함.

□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내년도 APEC에서는 국경 내 장벽(behind the border)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동문제가 이슈화 될 타이밍은 아님.

□ 조해영 나라홀딩스 회장

- 협력에는 기관(institution)이 먼저냐 손에 잡히는 협력 관계가 먼저냐 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음.
- 실제적인 결과(practical issue)를 가지고 협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함. 조건을 먼저 구체화하고, 실제적인 지역 기구를 구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임.
- 지구온난화, 건강, 질병 등의 문제에 관해 지역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 대계(grand design)가 될 것임.
- 금융허브에 관해서 정부 출범 시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엔 주춤한 것 같음.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면 고맙겠음. 우리나라는 IT강국이니까 IT와 금융을 접목한 섹터를 세계적으로 키우는 것이 실용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함.

□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팀 팀장

-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한·일 재계 회의에서 한·일 FTA 조속 재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함.
- 비즈니스 섹터에서는 ASEAN+3 등 보다는 한·중·일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임.
- 한·중 FTA도 재계 전체에서 찬반 격론이 있지만, 찬성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큰 것 같음.

□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한·중 FTA에 대해 전경련은 총론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각론에서는 다양한 반론이 펼쳐짐. 업계에서 분야별 구체적 연구를 통해 사안별로 구체적인 의견(feed back)을 줄 것을 당부함.

□ 허경욱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 금융허브의 기본 구상 자체는 제조업만으로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섹터를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서 시작함. 금융시장의 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의 변화는 없을 것임.
-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한 정책은 점진적인 과정이라 눈에는 잘 안 보임. 자본통합법의 경우 아직은 미미해 보이지만 향후 강력한 영향을 끼칠 것임.
- 한국자산관리공사(KIC) 등의 해외 투자로 우리나라가 자본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음. 자산관리(Asset Management)에 비교우위가 있고 구조조정 경험이 있는 것이 강점임. 이 강점을 살려 먼저 틈새시장에 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분야로 성장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
- FTA 협상 중에도 외환분야 규제완화 등 금융부분이 계속 논의되고 있음.

□ 양수길 KOPEC 회장

- 한국이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던 반면 노조, 영어, 생활환경 등과 같은 비금융 여건 개선은 상당히 느린 것이 문제임.

o 제한된 시간으로 아쉽지만 여기서 토론을 끝내야 함.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